

# 국토정책 Brief

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.

2025. 4. 14.  
No. 1009



발행처 국토연구원  
발행인 심교언  
www.krihs.re.kr

이 브리프는 나무를 베지  
않고 만든 생분해성 펄프  
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.

임상연 연구위원  
송지은 부연구위원  
조미향 부연구위원  
유예진 부연구위원  
정은진 전문연구원  
박효숙 전문연구원

##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적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

### 주요 내용

- 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령별 장래인구 추계와 도시규모별 공공시설 공급량 간 차이 분석, 일본 및 독일의 정책사례 분석을 통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 제시
- ②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연령대별 공공시설의 공급과 활용에 대한 전략 마련 필요  
- 인구구조 변화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악화와 공공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비용 문제를 초래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
- ③ 분석 결과, 2023년 대비 2040년 기준 유소년인구 23% 감소, 고령인구 35% 증가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수 165.9% 과잉,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56.7% 부족 등 세대별 이용 공공시설 공급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며, 대·중·소 도시규모별 공공시설로 시설 공급량 차이 발생
- ④ 일본은 저출산·고령화에 따라 공공시설의 공급물량 관리,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시설 운영관리 측면에서, 독일은 국민기본권으로서 공공서비스 공급원칙에 입각한 국토·지역계획 및 입지 구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측면에서 전략 마련

### 정책방안

- ① (기본 방향)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시설 공급총량 관리방안,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를 예측한 공급 및 운영관리 방향 설정 필요
- ② (주요 전략)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시설 공급 및 재편 원칙과 가이드라인 개발, 지자체 단위 공공시설 중장기적 공급 및 재편 계획 수립, 공공시설의 최적 배치와 복합화, 공공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전략 마련
- ③ (법·제도 개선방안) 「지방자치법」,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「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」,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인구구조를 고려한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
# 01.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공공시설에의 영향

## 미래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

저출생·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, 기술 발달과 생활양식 변화로 수요에 대응한 공공시설의 활용과 효율적 운영관리가 국정현안으로 대두

- 현재까지 지역 공공시설 대부분은 인구규모 또는 지자체별 균등배분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공급됨에 따라, 지역별로 공급된 공공시설들의 미·저이용 및 노후화 문제 해결,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자립도에 따른 시설 통폐합, 예산 및 인력감축 논의 지속 중
-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 유아동 및 학령인구와 고령인구 비율 역전으로 보육 관련 공공시설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, 고령자 대상 의료·보건·복지 관련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부 시설군별 수요 증감 방향성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

효율적인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세대 수요에 대응한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 관련 과제 도출 필요

- 이를 위해서는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형평성에 따른 공급보다는 미래세대의 서비스 및 시설 수요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공시설 공급과 운영관리 효율화 전략 마련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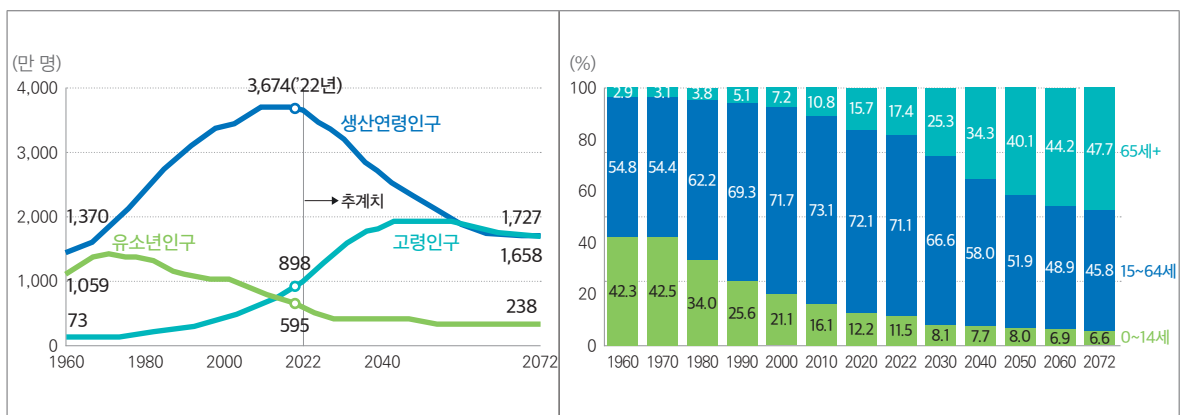
대부분의 공공시설이 전 연령 및 세대에게 필요한 부분인 반면, 돌봄(복지), 교육은 영유아, 학령인구, 고령자 등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라는 특징이 있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

## 유소년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에의 영향

우리나라 인구변화는 유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가 특징

- (2022년과 2072년 비교)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, 15~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감소(71.1% → 45.8%),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증가(17.4% → 47.7%), 0~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감소(11.5% → 6.6%)할 전망
- (2023년과 2040년 인구 비교) 연령별 인구구성비를 보면, 2023년 대비 2040년에 총인구 수 2%, 유소년인구 23%, 생산연령인구 21%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35% 증가할 전망

그림 1 연령별 인구구조(좌)와 연령별 인구구성비(1960~1972년)(우)



자료: 통계청 2023, 2.

공공시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, 특히 도시성장과 인구구조에 따른 영향이 큼

- 도시가 성장하면서 공간의 성격과 위계가 변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생활양식도 변화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공급·관리할 필요성이 낮아진 시설도 나타남
- 시설수요 변화에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며, 최근 한국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더불어 저출산, 생산연령인구의 감소,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설수요 예측의 중요성 증대
- 인구구조 변화는 지자체 세입감소에 영향을 미치고, 공공시설에 투입되는 지방재정 수요증가는 지자체 부담을 가중시켜 삶의 질 저하와 직결되어 향후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

표 1 인구구조 변화가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

구분		영향
인구	고령인구 증가	• 고령인구를 위한 서비스와 복지시설에 대한 지출수요 증가
	아동인구 감소	• 학교 등 아동 관련 시설수요 감소
재정 및 정부	공공세수 감소	• 지자체 세수 감소 • 지자체 서비스의 질 감소
	연금과 복지서비스 지출 증가	• 사회복지 지출수요 증가
	공공시설과 인프라의 잉여화	• 공공시설과 인프라의 잉여화 • 공공시설과 인프라의 질 저하

자료: Alan Mallach 2024, 183 <도표 5.1>을 일부 발췌하여 재인용.

## 02. 공공시설 관련 법·제도 및 정책 현황

### 공공시설 관련 개념과 법·제도 현황

공공시설 관련 법·제도에서는 “공공복리,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, 지역 활성화” 등 법·제도별 목적에 따라 시설의 범위, 공급, 운영,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공공시설 관련 개념과 유형이 제시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국토계획법)」,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)」에서는 시설기준과 세분화 규정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(이하 도시재생법)」,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)」은 개별 부처의 추진사업과 시설공급계획의 근거 제시
- 「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」, 「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」 등은 지자체 사회기반시설 공급·지원 기본계획의 근거를 제시

### 공공시설 관련 정책 현황

공공시설의 공급은 과거 각 부처별로 농어촌, 도시 등 특정 지역의 계획 수립을 통해 점적인 단위로 한정된 시설을 계획하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면, 최근에는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추진 중

공공시설 공급은 부처는 소관 시설에 한정하여, 지자체는 지역단위 개별 공공시설에 한정하여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, 지자체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 공급·운영관리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

표 2 공공시설 관련 주요 추진 정책 및 시설 현황

부처	사업명	추진기간	관련 시설(예시)					
			어린이집	유치원	학교	노인요양시설 <sup>2)</sup>	재가노인복지시설	복합
국가균형발전위원회 <sup>1)</sup> (국토교통부 외 6개 관계부처)	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	2020~2022	●	●	●	●	●	●
	생활SOC 복합화 사업	2020~2022	●	●	●	●	●	●
지방시대위원회 (국토교통부 외 7개 관계부처)	지역활력타운 사업	2023~	●	●	●	●	●	●
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	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	2020~	●	●	●	●	●	●
국토교통부	도시재생사업	2014~	●	●	●	●	●	●
	지역개발사업	2010~	●	●	●	●	●	●
해양수산부	어촌신활력 증진사업	2023~	●	●	●	●	●	●
농림축산식품부	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	2010~	●	●	●	●	●	●
과학기술정보통신부	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	2019~	●	●	●	●	●	●
보건복지부	국민돌봄 통합지원 정책	2024~	-	-	-	●	●	●
교육부	학교복합화사업	2023	●	●	●	-	-	●

주: 1) 현 지방시대위원회.

2) 노인관련시설은 「노인복지법」 시설 기준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, 노인여가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,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다섯 가지로 분류되고,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시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노인전문병원 등 세 가지로 분류됨.

자료: 각 부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.

## 03. 수요 대비 공공시설 공급 현황 및 장래 추이

### 미래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주요 공공시설 범위 설정

**(분석대상)** 공공시설 공급 현황 및 미래 수요 분석을 위한 분석대상은 지역 내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는 주요 공공시설로 설정

- 돌봄·복지시설로는 국공립어린이집, 유치원, 노인요양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을, 교육시설로는 초등학교를 분석대상으로 함

**(분석범위)** ① 대도시는 50만 이상, 중소도시는 10만 이상 50만 미만, 소도시는 10만 미만으로 공간적 범위를 나누어 설정하고, ② 공공시설 공급 현황분석은 2013년부터 2070년까지 시간적 범위를 설정

- 공공시설의 공급 현황은 지난 10년간(2013~2023년)의 시설 수 변화를 분석하고, 미래 수요는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, 추가적인 시설 공급이 없다는 가정하에 시도는 2070년, 시군구는 2040년까지 공급률 변화를 분석

표 3 분석대상 및 범위

공공시설 범위		자료출처	대상 연령(만) <sup>주)</sup>
돌봄·복지	국공립어린이집	보건복지부 보육통계	0~5세
	유치원	통계청 e-지방지표(교육)	3~5세
	노인요양시설	보건복지부 누리집	65세 이상
	재가노인복지시설	보건복지부 누리집	65세 이상
교육	초등학교	통계청 e-지방지표(교육)	6~11세

주: 인용된 자료의 출처(링크)는 분석결과마다 별도 표기하며, 연령 구분은 「유아교육법」 「초·중등교육법」 「노인복지법」 및 통계청의 정의를 따름.

자료: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1호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3조 제1항과 제2항, 「노인복지법」 제1조의2 제5호, 통계청 학령아동 변동 추계([https://www.index.go.kr/unity/potal/main/EachDtlPageDetail.do?idx\\_cd=1519](https://www.index.go.kr/unity/potal/main/EachDtlPageDetail.do?idx_cd=1519), 2024년 9월 25일 검색)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.

## 수요 대비 공공시설 공급 변화 추이

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저위추계(최소인구 추계), 중위추계(기본추계), 고위추계(최대인구 추계) 자료를 활용하여 미래 공공시설 수요 변화에 따른 공급 추이를 분석한 결과, 세 가지 추계결과가 전반적으로 일관된 경향을 보임

- 특히, 중위추계 기준으로 초등학교 수는 2023년 대비 2070년 277.9% 증가하는 반면, 노인요양시설은 55.0%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, 세대에 따른 공공시설 공급 불균형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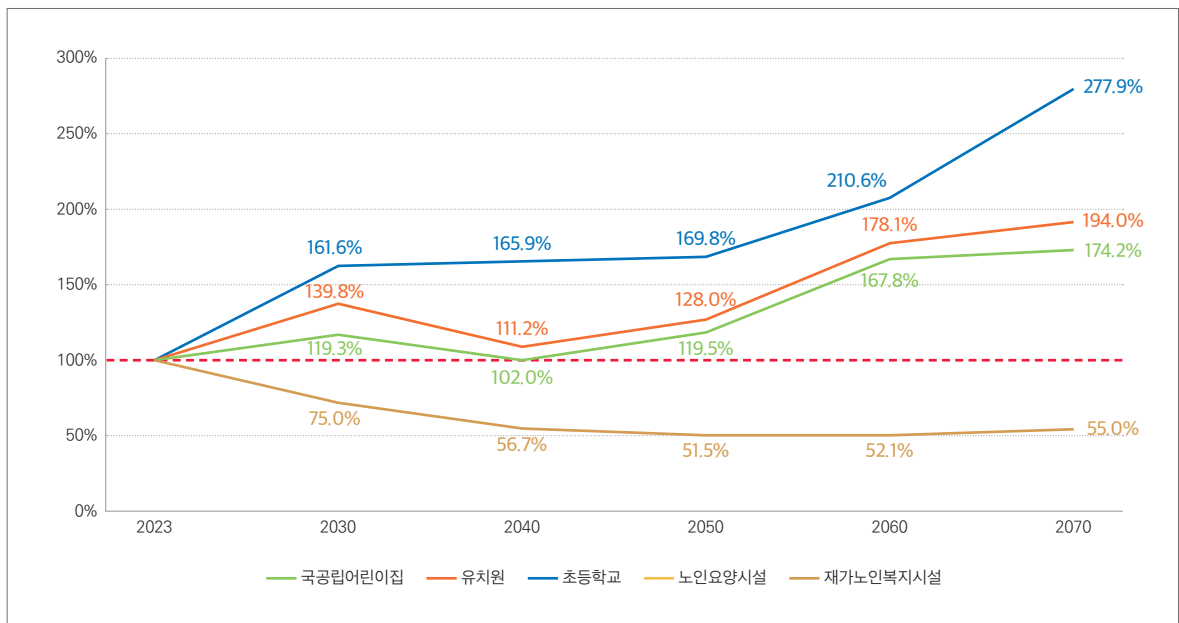
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수요를 초과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공급 및 운영계획 마련이 시급

- 중위추계 기준, 초등학교 수는 2023년 대비 2050년 169.8%, 2060년 210.6%, 2070년 277.9%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, 유소년시설 중 수요 대비 공급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
- 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 수준은 204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에는 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178.1%, 167.8%, 2070년에는 194.0%, 174.2%까지 증가할 전망

또한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 추세

- 노인요양시설은 2023년 대비 2040년 56.7%, 2050년 51.5%, 2060년 52.1%, 2070년 55.0%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비해 시설 공급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예상
- 재가노인복지시설 역시 노인요양시설과 유사한 비율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반적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층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전략 마련이 시급

그림 2 공공시설별 미래 공급률 변화 추이(중위추계)



자료: 통계청,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,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(상세한 출처는 본 보고서 <표 3-8> 참조).

## 도시규모별 수요 대비 공공시설 공급 변화

2023년과 2040년의 시설 공급규모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, 대·중·소 도시 중 소도시에서 유소년시설 부족이 상대적으로 심화되며, 고령인구 대상 시설은 모든 규모의 도시에서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

- 초등학교는 2023년 대비 2040년에 소도시 48.9%, 중소도시 20.0%, 대도시 40.7% 등 모든 도시에서 수요 대비 공급규모가 증가하며,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은 소도시에서만 7% 증가
- 고령인구 대상시설은 2023년 대비 2040년에 모든 규모의 도시에서 최소 30% 이상 감소

표 4 도시규모별 공공시설 수요 대비 공급 변화

(단위: %)

구분	2023년			2040년(2023년 시설의 공급규모 유지)		
	소도시	중소도시	대도시	소도시	중소도시	대도시
국공립어린이집	27.1	19.9	22.8	26.8 <sup>1)</sup> (-1.1) <sup>2)</sup>	17.2 (-13.6)	20.5 (-10.1)
유치원	47.3	51.7	57.0	50.6 (+7.0)	47.6 (-7.9)	54.7 (-4.0)
초등학교	101.4	100.0	99.8	151.0 (+48.9)	120.0 (+20.0)	1.1 (-45.0)
노인요양시설	2.3	3.1	2.0	1.6 (-30.4)	1.7 (-45.2)	1.1 (-45.0)
재가노인복지시설	1.3	1.4	1.2	0.8 (-38.5)	0.8 (-42.9)	0.7 (-41.7)

주: 1) 2023년 해당 공공시설 수를 기준으로 한 2040년 인구 수 추계에 따른 공급률.

2) 2023년 대비 2040년 공급률의 증감률.

-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함.

- 보육시설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단체,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며, 노인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분석함.

자료: 통계청, 한국어성정체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,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(상세한 출처는 본 보고서 <표 3-8> 참조).

## 04.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의 사례

### 일본: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종합적인 공공시설 공급전략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

**(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에 대한 고려)** 일본의 공공시설 운영관리정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구의 증감을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의 중요 지표로 삼아 반영

- 총무성의 공공시설 공급 원칙, 지자체 중장기계획 수립 시 시설 재편방안 등에 구체적으로 포함
- 특히 기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단순 유지보수 이외에 지자체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재편방식을 제공

**(중앙-지자체의 역할 분담)** 또한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공공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, 중앙정부를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

**(공공시설 장수명화 방안 등의 종합적 방침 필요)** 일본 공공시설 관리의 특징 중 하나인 장수명화 방안은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 방안으로 활용

**(공공과 민간의 협력방안)** 일본에서는 공공시설의 관리에 민간활력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데,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공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

### 독일: 중심지 체계에 따른 공공시설 입지 및 공급 전략 추진, 인구감소에 따른 계획 조정

**(공간계획을 통한 비전의 가시화)** 독일은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상에 공공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균형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지를 명시함으로써 국토 및 지역계획의 선언적 성격을 탈피

- 국토계획과 지역계획에서 공공서비스의 입지와 공급기준에 대한 공간화된 방침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며 계획에 기초하여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고자 함
- 독일에서 공공서비스 보장은 정책체감도가 높은 민감한 사안으로, 이해관계의 조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보장 원칙이 공간적으로 가시화된 데이터 및 시각화자료 제공
-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 중장기 종합계획 등에서 공공시설 및 서비스의 공급 현황, 접근성 수준, 장래 공급계획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으나, 의무사항이 아니며, '공공서비스 보장'에 대한 합의된 원칙은 미비하여 국토·지역계획 및 도시·군기본계획에서 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

**(거점기반 공공서비스 효율화 방안 모색)** 독일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에 따른 공공서비스 효율 저하 문제를 겪고 있으며, 이를 거점 집중화라는 방식을 통해 해소

- 집중화의 주요 방식 중 하나로 지역 연계를 전제로 하는 거점을 다층화하여 지역 간 협력방식 다변화 시도

(행정의 사각지대인 경계지역의 공공서비스 보장) 독일은 국가경계를 인접국가와 공유하는 만큼 자칫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는 경계지역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초국가차원에서 연계방안 모색

- 인접한 국가들과 공공서비스 및 시설의 이·활용을 공유해야 하는 만큼, 공공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고려가 기민하게 이루어지면서, 지역 간 서비스 공급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의 시사점을 제공

(다양성 속의 일관성 확보) 연방주마다 거점의 임계값 설정이라든가 공공서비스의 우선순위 등이 지역 여건에 맞춰 운영됨으로써 정책의 지역화가 진전

- 연방주마다 개성 있는 지역정책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에서의 기본원칙은 전 국토 단위로 계획되고 이를 연방주가 존중하는 문화 정착
- 우리나라도 중앙정부 단위의 기본원칙을 마련하되, 개성 있는 지역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거점의 임계값에 대한 자유로운 설정과 합의, 지역 여건에 따른 유연한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의 기본 틀 마련 중요

## 05. 미래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

### 기본방향

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“기존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최우선, 불필요한 신규 공급” 최소화 원칙에 따라 총량 관리방안 마련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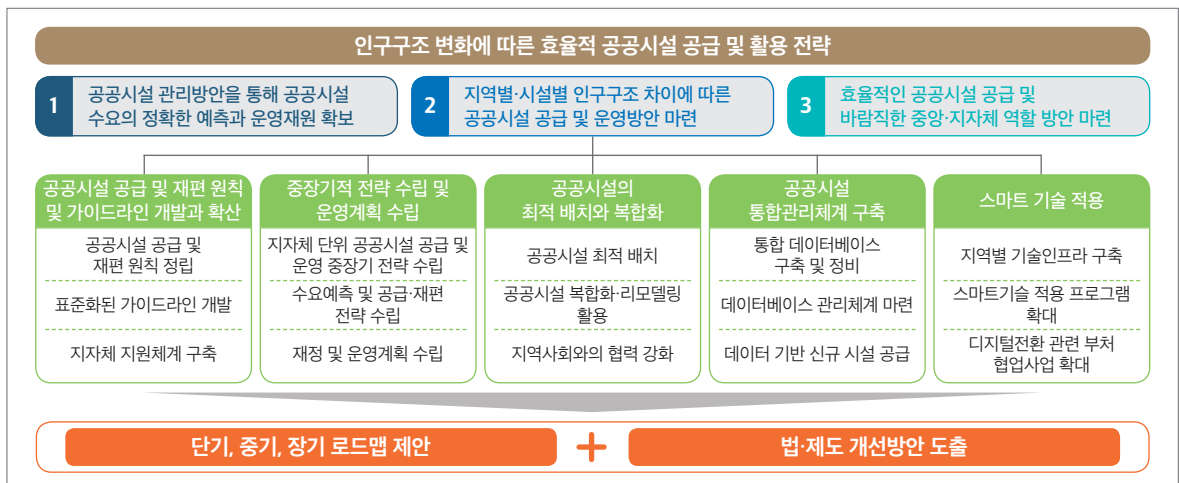
#### 공공시설 공급 및 재편 원칙(예시)

- (원칙 1) 기존 공공시설의 효율적 이·활용이 우선으로 신규 공급은 차선책
- (원칙 2) 신규 공급은 가능한 집약복합화 시설로 구상
- (원칙 3) 전체 공공시설의 물량 및 연면적은 유지 또는 축소
- (원칙 4) 공공시설의 공급 및 재편 계획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실시
- (원칙 5) 인간의 자원과 노하우를 공공시설 운영관리에 적극 활용

인구구조 변화의 양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공공시설의 공급과 운영방식도 해당 지역의 인구변화 예측 결과를 반영해 조정이 필요

-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과 증가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, 특히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촌지역은 별도의 전략 마련 필요
- 효율적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중앙·지자체 역할 방안 마련 필요

그림 3 미래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 구상도



## 주요 전략

**(공공시설 공급 및 재편 원칙,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확산)** 공공시설의 공급과 재편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공공시설 재편에 관한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, 이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제공

**(공공시설 중장기적 공급 및 재편 계획 수립)**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변화, 재정 상태,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한 공공시설 공급 전략을 마련하고 계획 수립

-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유연한 공급 및 재편 계획을 수립하되, 필수적으로 수요 예측, 공급-재편전략, 재정계획, 운영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

**(공공시설의 최적 배치와 복합화)** 지자체는 지역별 인구감소 또는 증가 패턴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시설의 최적 배치방안 마련

- 이를 위해 기존 시설의 활용도 평가, 주민의견 수렴, 접근성 분석절차 이행

**(공공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)**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순차적으로 공공시설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정비함으로써 현재의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

**(스마트 기술 적용)**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, 가이드라인에는 IoT, AI 등을 활용한 시설 관리와 유지보수 자동화 등 구체적인 기술 적용방안을 제시

## 법·제도 개선방안

**(「지방자치법」 개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)**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 제1항을 수정하여,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특성에 따라 공공시설의 공급과 운영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**(도시기본계획, 도시관리계획과 공공시설 계획 간 연계 강화)**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내 공공시설 관련 내용을 강화하여 단순한 공급량 검토에 그치지 않고,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공공시설 관리 및 재편성계획을 포함

**(공공시설 통합 계획 수립을 위한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)**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를 개정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공공시설의 통합 운영 및 최적 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

**(폐교재산 활용성 증대를 위한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)**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4조와 제5조를 개정하여 현재 한정된 기능과 운영 주체를 지역 활성화와 지역 수요에 맞는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

**(가칭) 공공시설의 효율적 공급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)**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시설 공급 전략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
- 참고문헌** 통계청. 2023. 장래인구추계: 2022~2072년, 보도자료. [https://kostat.go.kr/board.es?mid=a10301020600&bid=207&act=view&list\\_no=415453](https://kostat.go.kr/board.es?mid=a10301020600&bid=207&act=view&list_no=415453) (2024년 4월 13일 검색).
- \_\_\_\_\_. 학령아동 변동 추계. [https://www.index.go.kr/unity/potal/main/EachDtlPageDetail.do?idx\\_cd=1519](https://www.index.go.kr/unity/potal/main/EachDtlPageDetail.do?idx_cd=1519) (2024년 9월 25일 검색).
- Alan Mallach. 2024. 축소되는 세계: 인구도, 도시도, 경제도, 미래도, 지금 세계는 모든 것이 축소되고 있다. 김현정 역. 서울: 사이(원저: *Smaller Cities in a Shrinking World*. 2023. Washington D.C.: Island Press)

- **임상연**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(sylim@krihs.re.kr, 044-960-0230)
- **송지은**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(jesong@krihs.re.kr, 044-960-0674)
- **조미향**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(mhcho@krihs.re.kr, 044-960-0320)
- **유예진**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(yyjin@krihs.re.kr, 044-960-0214)
- **정은진**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전문연구원(ejjeong@krihs.re.kr, 044-960-0676)
- **박효숙**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전문연구원(hspark@krihs.re.kr, 044-960-0223)

※ 이 브리프는 "임상연, 송지은, 조미향, 유예진, 정은진, 박효숙, 2024.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적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. 세종: 국토연구원" 보고서를 요약·정리한 것임.

※ 이 브리프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서, 정부나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.